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인터뷰

# “광주형 일자리는 상생 모델... 협조할 것”

보수 불모지 호남 적극 지원  
보수 주도적 역할 한국당 중심 통합해야  
비전 먼저 세워야 인적 청산 가능

17일 광주를 찾은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을 위해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바른미래당 국회의원과 통합에 대해서는 “보수 통합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야권 공조가 먼저다”며 조심스러운 답변을 내놨다.

김 위원장의 이날 광주 방문은 한국당의 최대 약점으로 손꼽히는 ‘호남’과 ‘청년’을 동시에 겨냥한 행보여서 관심을 모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묘지를 돌며 열사들의 뜻을 기리는 등 호남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또, 여성청년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청년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김 위원장은 이날 조선대학교에서 특강을 통해 청년들과 격 없는 대화를 이어나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지역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를 통해 “당분간 야권과 공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원들의 개별 움직임을 지켜봐야 한다. 기본 방향은 통합이다”면서 “한국당이 보수 중심성을 확보하고 있고, 언제든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국당 중심의 통합을 강조했다.

통합 방식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부 하나가 되기에는 이질적인 보수가 있다”며 “당 대 당이 아닌 다양한 집단과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보수 통합이 가능한 분들을 영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포함돼 있는 바른미래당과의 통합에 대해서는 “이 시기에서 통합 이야기를 꺼내면 손학규 대표가 화를 내고, 결국 야권 공조가 깨진다”며 “최근 입당설이 제기된 중요한 분들이 현 시점에서 입당하라면 하겠느냐”고 전망했다.

그는 “인적 쇄신보다 비전과 가치를 세우는 게 먼저다. 현재 한국당 문제는 사람 아닌 비전과 가치의 문제다. 비전을 먼저 세워야 인적 청산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최근 노동계의 불참으로 위기에 몰린 ‘광주형 일자리’를 통한 현대자동차 완성차 광주공장 설립에 대한 관심이 드러났다. 노·사·민·정 대타협을 원칙으로 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높게 평가하면서 일자리를 늘리는 좋은 사례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국익과 경제, 노사 화합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 상생의 좋은 협치 모델로, 정부 지원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면서 “한국당 역시 자본, 노동계, 정부 등 노사정간의 좋은 타협 모델이며 한국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당의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의원들 사이의 토론이나 당 차원의 논의가 있었던 적은 없지만 우리가 상생의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김경철 열사의 묘소를 참배하고 있다. /나광주기자mjna@kwangju.co.kr

구도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한다는 말들은 많다”고 소개했다. 또 지난 지방선거에서 호남지역 후보자를 내지 못한 당을 쇄신하고 인재를 영입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보수 불모지인 호남에 대해서는 큰 고민이며, 명색이 커대 정당인데 당선되던 낙선되던 어느 정도 지원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솔직히 큰 고민거리 중 하나이다”고 어려운 속내를 털어냈다.

한편, 이날 오후 4시 조선대학교를 찾은 김 위원장은 200여 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희망 버리고 희망 찾기’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광주시 ‘노후공공임대주택 개선사업’ 국비 15억 확보

광주시는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관련 국비를 확보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은 15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전년도 5억2500만원보다 1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광주시는 공공임대주

택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공실 발생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는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시설개선사업은 기존 노후 시설의 발코니 세시 교체, 석면 철거공사와 함께 민선

7기 광주다운 주거문화 시책사업을 반영한 전국 최초의 ‘수요자 맞춤형 세대별 철거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문범수 도시재생국장장은 “이번 국비 확보를 계기로 광주만의 차별화된 시설 개선을 통해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노동계 ‘광주형 일자리’ 추가 질의

광주시 답변에 불만...최초 협상 요구안 포함·비밀협상 따져  
시 “노동계 참여 협상 테이블서 논의면 오해 불식될 것”

무산 위기에 있는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설립 사업’과 관련 지역노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가 17일 광주시에 추가 질의서를 보냈다. 16일 받은 답변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시는 조만간 이에 대해 답변하기로 했다.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는 17일 “광주시에 보낸 9개 항의 질의에 대한 시의 답변서를 받았으나 알맹이가 없다고 판단해 추가 질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의 추가 질의에는 ▲광주시의 최초 협상 요구안 ▲합작법인 및 공장 운영 주체 ▲투자유치 로드맵 등이 포함됐다. 노동계는 광주시와 현대차의 협상 이면에 다른 논의 내용이 있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모양새다. 광주시는 협상 참여를 수용한만큼 협상에 참여

한다는 내용이 즉각 파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만간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 명의의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질의서에서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는 “현대차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임금과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있고, 광주시는 현대차의 지시를 받아 현대차가 제시한 노동조건을 노동계가 수용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며 “도대체 완성차를 운영하는 주체는 누구이며, 현대차처럼 투자자가 기업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사례가 있다면 밝혀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 “광주시는 잘못된 비밀협상을 인정하고 사회적 대화 재개와 당사자인 노동계의 협상 이면에 다른 의의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 이외에도 ‘더 좋은 일자리 위원회 조

례 폐기’ 이유를 묻고, 투자 유치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현대차와 광주시가 대주주의 입장에서 앞으로 설립한 합작법인과 공장의 운영 방식을 논의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어느 한 쪽에서 일방적인 요구를 하거나 이를 수용하는 시스템이 아니다”며 “노동계의 참여를 간절히 바라고, 협상 테이블에서 함께 논의한다면 이 같은 오해가 불식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 “더 좋은 일자리 위원회 조례 폐기’는 이번 협상과는 별개의 사안이며, 민선 7기 조직 정비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어렵게 국내 투자를 결정했던 현대차의 입장을 고려해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비밀협상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경도 투자계획서 공개...특혜 의혹 못 밝혀

투자담보 조건 등 확인

전남개발공사와 미래셋의 1조원대 여수 경도관광개발 투자계약서가 공개됐다. 그러나 계약서를 열람한 전남도원들은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의혹을 밝힐 별다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개발공사는 17일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미래셋과 맺은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양수도 계약서를 기획행정위 소속 의원들에게 공개했다. 공개는 변호사 임의 아래 열람 방식이었다. 도의원 7명이 열람에 참여했으며, 1000쪽에 달하는 투자계약서 원본 전체를 살펴봤다. 계약서 주요 내용은 그동안 알려진 대로

미래셋이 여수경도 양수 대금 3433억원을 포함해 2024년까지 6000억원, 2029년까지 4000억원 등 모두 1조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손해배상 기준 및 양수도 대금 납부지연 시 지연손해금 조항도 포함돼 계약 이행을 보증했다.

손해배상 기준은 2029년까지 미 투자금액의 3%를 납부하는 조건이며, 지연손해금은 연 15%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했다. 또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운영 위탁을 맡았던 전남개발공사 자회사 전남관광 직원의 고용 승계와 외국인투자 3000만달러(약340억원) 유치 내용도 담겼다. 전남개발공사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및 미래셋이 사업시행자 지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 연륙교 건설 국비 재정지원 노력을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연륙교 건설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계약해제 시 위약금으로는 매매대금의 10%인 343억원을 내고, 미래셋의 귀책 사유일 경우 전남개발공사가 납부한 세금 지급과 원상회복 조건도 포함됐다.

열람에 참여한 한 의원은 “계약서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살펴봤지만, 오늘을 별다른 특이사항을 찾지는 못했다”며 “추후 열람 요청을 통해 계약서 검증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확보 ‘안간힘’

누적 미적립액 469억

광주시가 그동안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 적립하지 못했던 재난관리기금 확보에 심혈을 쏟고 있다.

올해 10월 현재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법정무적립액은 1281억원으로, 이 가운데 확보액은 원금기준 812억원(적립율 63%)이며, 미적립액은 469억원이다. 시는 기본적립액과 누적 미적립액을 합해 매년 2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기본적립액의 정상적인 적립과 누적 미적립액의 조속한 확보를 위해 투트랙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매년 최근 3년간 보통세 연평균액

의 1%에 해당하는 재난관리기금의 기본적립액은 가급적 본예산에 확보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누적된 미적립액 469억원은 2017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매년 50억원씩 적립해 나가고 있다.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매년 적립해야 하는 기본적립액도 2015년부터 100% 이상 정상적으로 적립중이다. 2019년도에도 기본적립액과 미적립액은 가급적 본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런 광주시 시민안전실장은 “재난관리기금 미적립액 확보를 위해 재정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특혜논란 새마을장학금

광주시, 폐지키로

광주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그동안 특혜 논란이 제기된 새마을장학금이 폐지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17일 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새마을장학금 폐지 여부를 묻는 정외당 장영주 의원의 질의에 ‘즉시 폐지’를 결의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즉시 폐지’ 결정에 따르기로 함에 따라 내년부터 장학금 지급은 전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마을장학금은 1975년 내부부 준칙에 의해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가 전국적으로 제정됐고, 광주시에서는 1978년 제정해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주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

**노안수술 받으면**  
돋보기 없이  
J1, J2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1652 point  
68247581  
251649783  
130758492  
246371280  
462810973  
576214302  
691749802  
877111004

신세계안과 문의 1566-9988

**농촌의 새로운 희망**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태양광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에너지관리공단 **대통령령 제28838호, 5년거치 10년상환, 연 1.75% 가능**  
농협 **70~90% 용자 지원 사업 선착순 접수**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교박교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정직·신뢰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